

중기부,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 발표

- 56만 소공인의 '25~'27년간 성장 정책방향 제시 -

- 경기도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에서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소공인, 전문가, 유관기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 “다시 뛰는 소공인,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①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②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③경영부담 완화, ④성장동력 확충 4대 전략과제와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에 따르면 중소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8일(수) 경기도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1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총 11회차를 맞이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취임 직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으로, 이번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에서는 소공인, 전문가, 지자체 및 상생기업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공인은 '22년 기준 56만개 사업체, 1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9%, 일자리의 25.7%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기계장비와 같은 뿌리산업에서부터 식료품, 의복·액세서리와 같은 소비재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국내 뿌리산업과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 제정을 시작으로, 2차례에 걸쳐 소공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프라 구축, 스마트화, 판로개척, 작업환경 개선 등 소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 1차 종합계획('17~'21년), 2차 종합계획('22~'26년)

이러한 노력에도 최근 가속화되는 제조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소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결하고자 소공인, 전문가, 협·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와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2년 앞당겨 수립하게 되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소공인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였으며, 참석한 소공인 대표들은 “소공인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종합계획의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뿌리 내리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오영주 장관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세계 4위로, 이는 국내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며 생산 기반을 탄탄히 지탱해 온 56만의 소공인들의 노력과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실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챙기겠으며, 소공인들이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은 물론 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 주요 내용]

중기부는 “다시 뛰는 소공인,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4대 전략과제인 ①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②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③소공인 경영부담 완화, ④소공인 성장동력 확충과 제도 전반에 대한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전
및
목표**

다시 뛰는 소공인,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 ◇ 광역중심 소공인 육성전략 수립 : ('24) 0 → ('27) 10개
- ◇ 지자체 소공인 지원 조례 제정 : ('24) 22 → ('27) 86개
- ◇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 ('24) 51 → ('27) 71개

**4
대
전략**

①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② 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 추진 ✓ 소공인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반형, 관광자원형, 상권생활형 지원 강화 ✓ 인프라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계지원 강화
③ 소공인 3대 경영부담 완화	④ 소공인 성장동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원 강화 ✓ 기술 및 중장년층·외국인 인력 양성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품 수제품 등 브랜드화 지원 ✓ 국내·외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 ✓ 제조기술 지원 강화 ✓ 대기업, 소공인 간 협업화 촉진

제도 정비 : 소공인 자긍심 고취 및 제도 정비	
소공인 자긍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소공인 대국민 홍보 강화, 기능경진대회 및 유공자 포상
소공인법 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환경 변화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한 소공인법 개정 등

전략 1.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7년까지 광역 지자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 추진과 지역 내 소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 지원 및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우수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25년부터 3년간 판로개척, 스마트제조, 작업 환경 개선에 중기부 소공인지원사업의 일정 규모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 2. 소공인 집적지를 집중 육성한다.

'27년까지 소공인들이 모여 있는 집적지 20곳을 추가 발굴·지정하고, 업종 및 입지 특성에 따라 생산기반형, 관광자원형, 상권생활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한다.

< 소공인 집적지 3가지 발전유형화(안) >

① (생산기반형 집적지)	▶ 산업단지 등 제조생산 거점을 구심점으로 조성된 집적지
② (관광자원형 집적지)	▶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소비재 중심의 체험·테마형 집적지
③ (상권생활형 집적지)	▶ 제조환경과 상권이 밀접하게 연관된 도심 인접 집적지

산업단지 등 제조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조성된 생산기반형 집적지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생산거점으로 육성을 추진한다.

지역특산품 등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집적지는 지역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체험·테마형 관광지로 시범 조성하고,

도심에 밀접한 상권생활형 집적지가 활성화되면서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확산을 포함한 소공인법 내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 추진한다.

또한, 집적지 내에서 소공인을 지원하는 인프라 시설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주도로 소공인 공동 작업장을 구축·운영할 경우에는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전략 3. 소공인이 겪는 금융, 인력, 근로환경 3대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소공인들이 겪는 금융, 인력, 열악한 근로환경 3대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소공인 납품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미회수 납품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보증 상품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 외국인력 등 채용을 지원하고, 도제식 기술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 4. 소공인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소공인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수 제품 브랜드화, 국내·외 판로개척, 제조기술 스마트화 등도 지원한다.

장인정신과 희소성을 보유한 우수 제품을 발굴·브랜드화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육성하고 전략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지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온라인 직거래 확대, 소공인 전용 판매장 운영 등 다양한 정책으로 소공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우수 소공인을 선별하여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까지 연계 지원하는 단계적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며,

소공인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사업 지원대상을 소공인간, 대기업·향토기업, 지역대학 컨소시엄 참여도 허용할 예정이다.

제도 정비. 소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제도 전반에 대해 정비한다.

소공인의 국민 이해도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우수 소공인 발굴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 관련기관·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소공인법 전면 개정, 온라인 소공인 확인서 발급 등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정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실 지역상권과	책임자	과 장	김윤우 (044-204-7880)
		담당자	사무관	박현용 (044-204-7885)
			사무관	남궁은영 (044-204-7882)
			주무관	이일권 (044-204-7883)
			주무관	차우건 (044-204-7886)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책임자	과 장	신훈목 (032-450-1151)
	담당자	주무관	허 준 (032-450-1141)	



I 추진 배경

- 소공인은 국내 제조업의 근간*이자 서민층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며 지역산업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중요성이 여전히 저평가

* 소공인은 56만개로 제조기업의 88.9%, 고용은 128만명으로 제조고용의 25.7% 차지

- '15년 「소공인법」 제정·시행을 계기로 소공인 정책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차*(‘17~’21), 2차**(‘22~’26)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추진

* 1차 계획 : 소공인 예산 확대, 개별 소공인에 대한 판로 및 스마트화 등 전용사업 추진

** 2차 계획 : 1차 계획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혁신성장, 집적지 지원 등 소공인 지원체계 고도화

◇ 소공인을 국내 제조산업과 지역산업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소공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3차 종합계획을 2년 앞 당겨서 수립

II 소공인 경영환경 진단 및 평가

- **[중앙-지방 협력 부족]** 현행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전략 수립 및 맞춤형 지원 한계

* 17개 광역 지자체중 소공인 지원 조례 시행 지자체는 10곳, 소공인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7곳으로 지자체 관심이 부족

⇒ 광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집적지]** 집적지 중심으로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과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부족

⇒ 현재 구축된 인프라를 더 많은 소공인들이 활용하도록 운영방식을 개편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집적지구 연계지원 강화 필요

□ **[경영 애로]** 소공인 특성과 경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공인 경영환경에 다양한 애로가 발생하고 정부지원으로만 해소하기에는 한계

⇒ 중앙·지자체·민간기업 등이 협력을 통해 납품대금 회수, 숙련 기술 전수, 외국인 취업 등 수요자 맞춤형 경영부담 완화 정책 필요

□ **[성장 정체]** 소공인은 사업 확장보다는 現 사업규모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고 브랜드 개발, 판로개척 어려움으로 성장동력이 취약

* 소공인 향후 경영계획 : 현행 유지 88.5%, 업종전환·휴폐업 6.6%, 확장 4.9%

⇒ 소공인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도록 브랜드화, 국내·외 판로개척, 기술, 협업 등을 지원 강화 필요

Ⅲ 정책비전 및 추진과제

비전 및 목표	다시 뛰는 소공인,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 광역중심 소공인 육성전략 수립 : ('24) 0 → ('27) 10개
	◇ 지자체 조례 제정 : ('24) 22 → ('27) 86개
	◇ 집적지구 지정 : ('24) 51 → ('27) 71개

4 대 전략	①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② 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 추진 ✓ 소공인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반형, 관광자원형, 상권생활형 지원 강화 ✓ 인프라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계지원 강화
	③ 소공인 3대 경영부담 완화	④ 소공인 성장동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원 강화 ✓ 기술 및 중장년층·외국인 인력 양성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품 수제품 등 브랜드화 지원 ✓ 국내·외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 ✓ 제조기술 지원 강화 ✓ 대기업, 소공인 간 협업화 촉진

제도기반 : 소공인 자긍심 고취 및 제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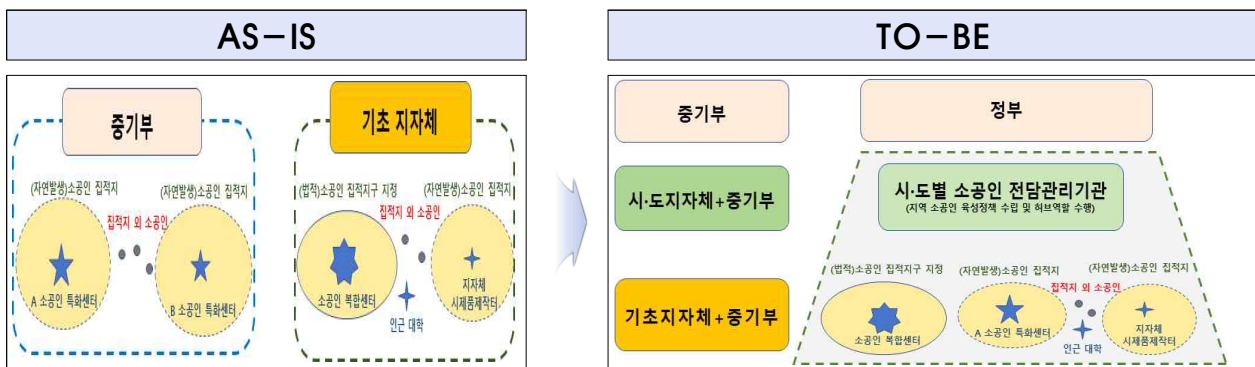
소공인 자긍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소공인 대국민 홍보 강화, 기능경진대회 및 유공자 포상
소공인법 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환경 변화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한 소공인법 개정 등

IV 주요 추진과제

전략 1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체계 구축

1)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 추진

- **(추진체계)** 중기부와 광역 지자체가 협력하여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 계획 수립 → 중기부와 지방정부가 집중 지원
 - **(집중 지원)** 3개년 프로젝트 목표달성을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보완
 - * **(중기부)** 프로젝트 확정, 소공인 지원사업 연계 지원(25년 10%이내, 매년 단계적 증액)
 - (지자체)** 지자체 지원사업, 지역 내 소공인 지원기관(특화·복합센터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 타부처·기관의 지원사업 등 연계
-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도입)** 광역 지자체별 소공인 전담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지역내 소공인 지원기관간 통합지원 및 허브 역할 수행



2) 소공인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역 소공인 정책을 정부와 지자체, 관련 지원기관이 함께 논의하고 협업·소통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
 - * **(중앙)** 관계부처(중기·고용·행안·산업·국토·문체부 등), 지자체, 관련 전문가·협단체 등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원팀 소공인정책협의체' 구축
 - (지역)** 지역특화 소공인·로컬크리에이터, 지역 지원기관 등이 함께 모이는 지역기반 '소공인 혁신생태계 협력네트워크' 구성·운영

전략 2

소공인 집적지 중심 육성

1) 집적지 발전유형별 지원 강화

- (발전유형화 지원) 업종·입지 특성을 분석하여 집적지 발전유형을 3가지로 구체화하여 집적지구 지정 및 연계지원 강화
 - (① 생산기반형 집적지) 제조생산 중심의 소공인 집적지를 산업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생산거점으로 육성
 - (② 관광자원형 집적지)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높은 집적지에 관광개발사업과 결합하여 체험·테마형 관광지로 조성
 - (③ 상권생활형 집적지) 도심내 소공인 집적지를 상권사업과 거주·생활개선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도시제조산업 거점으로 육성
- (집적지구 지정 요건 완화) 집적지구 동일업종 요건을 소공인 간 협업이 가능한 연관 업종까지 완화하는 개방형 집적지구로 개편 추진

2) 인프라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 (센터 확충) 현장 접점에서 소공인을 지원하는 특화센터를 모든 집적지구(51곳)로 단계적으로 확충, 지자체와 협업하여 복합센터 확대
- (기능강화) 既 구축 인프라 시설에 지원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소공인 현장진단 통한 애로 발굴, 사업추천 기능 부여
- (우수센터 지속지원) 기존 특화지원센터 국비줄임제(5년까지만 지원)를 개편하여, 최소 3년 운영기간을 보장하고 우수센터에 한해 지속 지원(25~)
- (상생형 센터 확산) 신규 또는 既 운영 중인 특화·복합센터와 집적지 등을 대상으로 대기업·향토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확산(25~)

전략 3

소공인 3대 경영부담 완화

1) 금융지원 강화

- **(계약이행 보증보험 신설)** 우수 소공인 대상 미회수 납품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 보증보험 상품 신설
- **(매출채권보험 지원)** 17개 광역 지자체 매출채권보험료(年 매출채권 0.1~5%) 약 50% 지원 中, 기초 지자체 추가 지원 검토 추진
- **(매출채권 현금화 지원)**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지원규모를 확대(375 → 675억원), 소공인에 우선 공급
- **(정책자금 지원 강화)** 지역 우수 소공인에 대해 소공인 특화자금 이차보전(1~2%p 이자) 추가 지원 및 직접대출 추진 검토

< 지역 우수 소공인에 대한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안) >

현행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방식) 대리대출• (지원내용) 시설자금 5억원내(운전자금 1억원 내)• (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방식) 대리대출, 일부 직접대출• (지원내용) 시설자금 5억원내(운전자금 1억원 내)• (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지자체 이차보전

2) 기술 및 중장년층·외국인 인력 양성

- **(기술인력 양성)** 업종별 기술교육 장비, 전문강사를 갖춘 기술교육 훈련기관을 지정하여 도제식 기술교육을 통해 기술 인력 양성
- **(중장년층 재취업)** 소공인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대상으로 중소기업연수원, 훈련기관 등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까지 연계 지원
- **(외국인력 채용)** 민간과 협력을 통해 온라인 매칭상담회 개최, 체불임금 보증상품 개발, ODA 연계 등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지원

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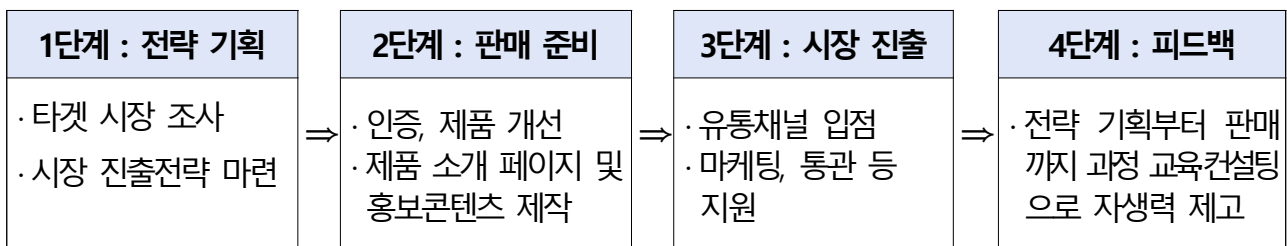
- (안전교육) 집적지구 중심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소공인에 산재보험 요율 인하 추진
- (안전진단 및 개선) 노후화된 작업장에 대해 화재, 전기·가스시설 등 위험요인을 사전 진단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
- (민간 손해공제) 중기중앙회와 협업하여 소공인 사업장의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지원하는 소공인 손해공제 상품출시 추진
- (산재보험) 산재보험 기준보수액 총 12등급 중 7등급 이내 소공인에 대해 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80%(최대 3년) 지원 추진

전략 4 소공인 성장동력 확충

1) 명품·수제품 등 브랜드화 지원

- (브랜드화) 민간 마케팅 전문가 매칭을 통해 소공인의 브랜딩 전략 및 자체·공동 상표, 디자인 개선, 백년소공인 지정 등 지원
- (스타상품 육성) 민간 주도로 장인정신, 희소성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선발하고, 전략부터 판매까지 쏠단계 지원·관리하는 프로그램 도입

< 전담 매니징 프로그램 " (가칭)스타 소공인 99+1°C "(안) >



2) 국내·외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

- **(온라인 직거래 확대)** 민간 유통 플랫폼, 대기업 자사몰 등을 통해 소공인-소비자간 온라인 직접 판매(Direct to Customer) 확대
- **(오프라인 매장)** 정책매장(인천공항 면세점 등)과 민간매장(명동상권 등)에 소공인 제품 전용 판매장을 설치(샵인샵 방식)하여 공동판매 확대
- **(해외판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공인에 수출역량 단계별 지원과 해외 온·오프라인 매장을 확대 설치하여 해외진출 거점으로 활용
- **(판로확대)** 유명인사(인플루언서, 연예인 지망생 등) 협찬 등 바이럴 마케팅, 구매상담회·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바이어 발굴, 공공조달 지원 등

3) 제조기술 지원 강화

- **(기술문제 해결)** 연구기관, 지역대학 등 전·현직 전문가를 '소공인 닥터'로 위촉하고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해우소' 운영 추진
- **(공동 R&D)** 지역대학, 연구기관 중심으로 집적지 內 소공인의 기술문제 해결 및 공동 기술개발(R&D) 지원사업 신설 추진
- **(스마트화)**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후 수준진단을 통해 우수 소공인을 선별, 추천하여 스마트공장으로 연계 강화

* '24년도 지원대상 소공인 수요조사 → 스마트수준 진단 대상자 추천(소진공) → 스마트수준 진단 실시(기정원) → '25년도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기정원)

① 소공인 스마트 제조(소진공)
스마트공장 도입 前 테스트베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공정의 스마트화 자동화기기 설치 •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등

⇒
**스마트
수준진단**

② 스마트 공장(기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적용 • 데이터 실시간 수집·분석 → 공장제어

4) 대기업, 소공인간 협업화 촉진

- (협업 사전 준비) 소공인들이 협업을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전 (pre) 단계인 '협업동아리' 시범 추진
- (협업대상 확대) 현행 조합 중심의 “소상공인 협업사업”을 개편하여 대기업, 소공인간, 지역대학 컨소시엄도 참여 허용

제도기반

소공인 자긍심 고취 및 제도 정비

1) 소공인 자긍심 고취

- (방송매체 홍보) 공중파·SNS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강화
- (기능경진대회) 현재 지역·업종별로 개최되는 기능대회를 전수 조사하여, 전국대회 가능한 업종을 발굴하여 우선적 통합 실시
- (우수 소공인 우대) 백년소공인 등 기술력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우수 소공인 발굴·포상 등 우대

2) 소공인법 개정 등 제도 정비

- (법 전면 개정) 「소공인법」 제정('15) 후 대내·외 환경변화(디지털, 글로벌 등) 대응 및 혁신성장 지원에 한계 노출 → 전면 개정 추진
- (서류 간소화) 소공인 확인 서류 3종 → 1종으로 간소화 추진

< 소공인 확인 서류 간소화(안) >

구분	현행 제출서류		개선 제출서류 1종 소공인 확인서 <생략> <생략>
	제출서류 3종	제출서류 2종	
1.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
2. 제조업 확인서류	재무제표 등	재무제표 등	
3.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생략>	

V 과제별 추진일정

주요 추진과제	소관부처	일정
【전략 1】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체계 구축		
①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 추진	중기부, 지자체	'25~
② 소공인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중기부,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등	'25~
【전략 2】 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① 집적지 발전유형별 지원 강화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문체부 등	'25~
② 인프라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중기부, 지자체 등	'25~
③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연계지원 강화	중기부, 행안부, 지자체	'26~
【전략 3】 소공인 3대 경영부담 완화		
① 금융지원 강화	중기부, 민간, 지자체	'25~
② 기술 및 중장년층·외국인 인력 양성	중기부, 고용부, 민간	'25~
③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중기부, 고용부, 민간	'25~
【전략 4】 소공인 성장동력 확충		
① 명품 수제품 등 브랜드화 지원	중기부	'25~
② 국내·외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	중기부	'25~
③ 제조기술 지원 강화	중기부	'25~
④ 소공인 협업지원 강화	중기부	'25~
【제도기반】 소공인 자긍심 고취 및 제도 정비		
① 소공인 자긍심 고취	중기부	'25~
② 소공인법 전면개정 및 제도 개선 추진	중기부	'25~